



노다 총리는 작년 9월 초 취임하면서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시 호의적이었던 여론은 정부가 막상 소비세 인상 준비에 착수하자 냉각되고 있다. 명분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은 싫은 것이다. EPA_연합뉴스

소비세發 일본 정계 빅뱅 가시화

노다 총리, 서울 인상에 정치생명 걸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일체 개혁(소비세율 인상)을 관철하겠습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월14일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다음날의 발언으로 이번 정기국회(1월24~6월21일)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를 낮춰야 한다”며 소비세

인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나섰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에 미적대는 내각과 민주당을 움직여 작년 말과 연초에 걸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연금, 의료, 노인 요양, 저출산 등 4개 사회보장 분야에 전액 투입된다.

일본으로서는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제2의 그리스 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일



일본의 소비세는 5%로 대부분 10~20%대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소비세 인상이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소비세를 1% 포인트 올리면 2조6천억 엔 정도가 확보된다. 사진_연합DB

은 더욱 절실하다. 소비세를 1% 포인트 올리면 2조6천억 엔 정도가 확보된다. 5% 포인트를 인상하면 약 13조 엔이나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다 총리는 작년 9월 초 취임과 함께 일본의 '재생'을 위해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에는 여론도 소비세 인상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막상 소비세 인상 준비에 착수하자 여론이 갑자기 냉각됐다. 소비세 인상의 명분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은 싫은 것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이런 여론의 흐름을 놓칠 리 없다. 노다 총리의 증세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 세력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그

룹이 반대하고 있다. 소비세를 올릴 경우 선

거에서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서다. 소비세 인상은 세금을 올리

지 않기로 했던 2009년 정권 교

체 당시의 약속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다 총리로서는 '사면초

가'다. 소비세 인상으로 구

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진

정'이 멎혀들지 않고 있는 것

이다. 여론과 야권이 등을 돌리

고, 집권당 내부 의견도 양분돼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문제 해

결의 돌파구를 열지 못할 경우 총리직

을 사퇴하든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탱크' 오키다를 '선봉장'으로

하지만 '뚝심'의 노다 총리는 전혀 후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면 승부로 결판을 내겠다는 태세다. 이런 의지

Japan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안에 미적대는 내각과 민주당을 움직여 작년 말과 연초에 걸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가부채가 1천조 엔을 넘고 사회보장 예산 수요도 매년 1조엔 씩 늘고 있어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교육지책이다.

본은 올 3월 말로 국가부채가 1천조 엔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훌쩍 넘는 막대한 규모다.

노다 사면초가... 증세 추진에 여론 악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를 겪으며 세수 기반이 위축돼 예산(일반회계)의 50% 이상을 국채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간 사회보장 예산 수요가 1조 엔 씩 늘고 있어 도저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대부분 10~20%대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소비세 인상이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예산을 염출하느라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비세 인상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 인상이 민주당 정권의 당초 공약에 없던 것으로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KYODO_ 연합뉴스

는 내각을 소비세 인상 진용으로 재구축한 1월13일 개각에서 확고하게 표출됐다.

노다 총리는 삼고초려 끝에 평소 존경해마지않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민주당 간사장을 부총리로 영입하고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일임했다. 오카다 전 간사장은 올해 58세로 노다 총리보다 네 살 위다. 그는 과거 야당 시절의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하토야마 내각에서 외무상도 지냈다. 재무상이 유일한 경력인 노다 총리에 비해 정치 경륜이 훨씬 더 깊다. 증세론자로 작년 8월 말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당시 재무상을 밀어 총리로 옹립한 1등 공

신이기도 하다.

도쿄대 법대 출신의 원칙론자이며 일관성과 돌파력이 돋보이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시절 민주당 간사장을 맡아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 박탈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자와 그룹에 미운털이 박혀 있다. 돈 정치를 싫어하며 민주당 정권의 실력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계파를 거느리지 않고 '독야청청'하는 정치인이다.

노다 총리는 오카다 전 간사장을 마음으로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 노다 총리는 오카다를 부총리로 임명한 뒤 "오카다 씨는 선배 의원으로 늘 나의 1~2보 앞을 달려온 분이다. 나는 언제나 그의 뒤를 쫓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의 큰 과제(소비세 인상)에 직면해 흔들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확실한 결론을 낼 정치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작년 12월 초 참의원에서 자질 문제로 문책 결의를 받은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소비자상 겸 국가공안위원장 등 야권이 그동안 사퇴를 요구한 일부 각료를 교체했다. 정기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기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공명당 'NO'... 법안 통과 난망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소비세 인상은 민주당 정권의 당초 공약에 없던 것으로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먼저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실행 단계에서 총선으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복안이지만 자민당 등은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도 노다 총리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1월15일 보도)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대가 57%로 찬성 34%를 압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반대가 55%로 찬성 39%를 크게 앞질렀다.

노다 총리는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으로 여론의 호전을 기대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37%,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29%로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5% 포인트

와 2% 포인트가 하락했다. 작년 9월 초 내각 출범 당시의 지지율이 60%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노다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이 노다 정권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자민당 등 야권이 노다 총리의 소비세 인상 협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중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다 해도 참의원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노다 총리는 3월 말까지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권이 협조하지 않는 한 법안이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르익는 정계 재편 시나리오

야권은 노다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 사정도 녹록지 않다. 당내 최대 세력인 오자와그룹이 소비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작년 말 오자와그룹 의원 9명을 포함한 11명이 탈당해 반(反) 소비세 인상을 내걸고 신당을 결성했다. 이 신당은 오자와의 선발대라는 얘기도 떠돌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다 여의치 않으면 신당에 합류해 정계 재편을 시도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노다 총리로서도 정기국회에서 야권이 끝까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민주당 내 분열이 커질 경우 사퇴와 중의원 해산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 미뤄 보면 노다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옥쇄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에 정치생명을 건 이상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다. 노다 총리가 이때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 자리를 내놔야 한다. 집권당의 대표는 곧 '총리'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총리직 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연금, 의료, 노인 요양, 저출산 등 4개 사회보장 분야에 전액 투입된다. AP_ 연합뉴스

를 꺼낼 경우 9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정기국회에서 소비세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관련 법안을 무산시켜서라도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자민당 역시 9월에 총재 선거가 있다. 이 때문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그 이전에 총선 실시를 얻어 내지 못하면 총재 연임을 바랄 수 없고 총리직에 도전할 수도 없게 된다. 다니가키 총재가 결사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압박해야 하는 이유다.

노다 총리는 부정하지만 야권과 물밑 협상을 통해 중의원 해산을 조건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다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9월 전후의 총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에 대비해 정책 공약을 손질하는 등 벌써부터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택할 경우 정치권의 빅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정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노다 총리도 내심 이런 구도를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소비세 인상을 명분으로 내걸고 총선 정국으로 몰고 가서 구(舊) 정치를 상징하는 오자와그룹을 몰아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의 혁신 세력을 끌어들이 정치판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자기 뜻을 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중현 도쿄 특파원 kimjh@yna.co.kr